

2020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2020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1. 상임위원회 전체평가

1) 행정자치위원회

* 피감기관 : 기획조정실

* 위원장 : 홍종원, 위원 : 김종천, 문성원, 민태권, 우승호

- 시민에게 생중계되는 것 고려했을 때, 행정감사 질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각자료가 부족했다. 전체적으로 회의 진행 집중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정책을 질의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어 안타까움. 대전시 자료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바람.

2) 복지환경위원회

* 피감기관 : 보건복지국

* 위원장 : 손희역, 위원 : 이종호, 박혜련, 윤용대, 채계순

- 자료 준비를 통해 질의를 하는 모습은 있었으나 자료의 내용이 빈약한 부분이 있었으며 질의 시간에 자료 요청만 하다 끝내는 경우도 있었음. 자료의 준비나 사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다른 의원들보다 위원장이 질의를 할 때가 더 좋았다고 느꼈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같은 내용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다른 의원의 질의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다른 의원 질의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는 등 집중을 못하는 태도가 좋지 못하였음.

3) 산업건설위원회

* 피감기관 : 일자리경제국

* 위원장 : 김찬술, 위원 : 남진근, 박수빈, 오광영, 이광복, 윤종명)

-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 전체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이다. 사업의 내용을 확인 하는 자리가 아니고 변화를 이끌고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자리이다. 그래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조사를 충실히 해오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면이었다. 김찬술 위원장의 경우 질의

내용은 훌륭했지만, 위원회의 질의 평균 내용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4) 교육위원회

* 피감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위원장 : 구본환, 위원 : 김인식, 우애자, 정기현, 조성철)

- 교육청의 보도자료 및 교육 관련 이슈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질의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제공되는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준비 하는 모습이 부족하거나 본인의 질의에만 신경을 쓰느라 피감기관의 답변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2. 상임위원회 일일브리핑

1) 행정자치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9일(월) 10:00 ~ 16:50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 | |
|------|---------|
| 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 피감기관 | 기획조정실 |

■ 위원장 : 홍종원, 위원 : 김종천, 문성원, 민태권, 우승호

(2) 행정자치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_기획조정실 주요 안건

1) 혁신도시 유치에 관한 질의

- 새로운 대전을 위한 시작점인 혁신도시에 어떠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의함

+ 공공기관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수도권에 있는 120여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예정이 되어있는 것은 맞음. 대전시는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은행과 코레일관광개발 등 23곳을 선점해서 공표한 바가 있음.

- 중소기업부 세종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또한 중소기업유치를 위해 대전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질의함.

+ 이전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하지 않게끔 집행부해서 노력중임. 중소기업은행유치를 위한 대전시의 시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 혁신도시1에 경우 경쟁이 매우 치열했었는데, 이번 혁신도시2 경쟁에 있어 대전시는 타 지자체와 어떤 비교우위점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 대전시는 일단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며, 교통이 좋음. 또한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이 산재해 있고, 대덕특구와 같은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답변함.

2) 시정 공약 실천에 관한 질의

- 시정 공약과 관련하여 임기 내에 77개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가능한 건지, 또한 109개의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이 7개로 분류됨. 2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27.5% 공약 완료를 하위등급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 최대한 노력해서 임기 내 정상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문의한 자료는 작년기준이고 현재기준으로는 66.7%가 진행되었다고 답변함.

- 재정이 확보되지 못한 공약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형사업을 시민과 약속했는데 국고 탕만 하고 있는거 아닌지,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 재정 확보되지 못한 공약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은 매월 점검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니페스토와 평가하여 협의를 통해서 조정 중에 있음. 최선을 다하여 연말까지 조정을 끝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3) 생활SOC사업에 관한 질의

- 생활SOC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함

+ 생활SOC사업과 관련하여 4건 공모했으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답변함.

- 부지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공모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대전시가 SOC사업선정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생활SOC신청 건수 자체가 저조한 점에 대해 지적함. 또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 또는 교육청과 협업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질의함.

+ 부지확보에 있어서는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부지를 마련하여 생활SOC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도 교육청과 충분히 협업하여 사례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대전시가 학교 측에 보냈던 공문을 살펴보면, 사실상 제출할 수 없는 기한을 주고 사업을 신청하라고 한 사례가 있었음. 현재 대전시 내 30여개의 학교가 체육관이 없는데, 충분한 기한을 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생활SOC사업을 발굴해내기를 바람.

4) 인구 정책에 관한 질의

- 대전시의 저출산 현황을 언급하며, 까다로운 다자녀 혜택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전시 저출산 대책에 관해 질의함.

+ 양질의 일자리, 안정적인 주거 공급, 보육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 대전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단순하게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5) 예산집행 및 재정 계획에 관한 질의

- 보조금 집행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었는지 감시하고 있는지 질의함.
- + 예산담당관실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함.
- 코로나19 관련 예산편성 및 재정 총량 계획에 관해 질의함.
-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입은 서민 지원 등을 위해 예산 투입. 내수 경기 침체 및 불확실성이 상승하고 있어 일자리 확대 등 예산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필요한 부분에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3) 기타

- 대전시 홈페이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질의
- 대전형 뉴딜 정책과 한국형 뉴딜 정책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
- 여성창업시설 관련하여 지역 간이 형평성에 대한 질의
- 대전세종연구원 소속 연구원 출강에 대한 질의
- 수어통역사 정규직 채용에 관한 질의
- 인공지능기반 안내시스템 수어통역기술 출자와 관련한 질의
- UCLG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에 관한 질의
- 새로운대전위원회 타당성에 관한 질의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우승호 의원 : 장애를 가진 시민의 시각을 대변하여 질의함. 시민의 알 권리를 중심으로 대전시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개되는 것을 집중 공략함. 하지만 시정을 넓게 살피어 질의하는 모습이 부족해 아쉬웠음.
- 민태권 의원 : 전체적으로 시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하는 모습을 보임. 정보수집이 활발히 한 부분이 보였음. 다만 문제제기에 그치고, 대안 제시는 부족해 아쉬웠음.
- 문성원 의원 : 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임.

다만 인구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시대착오적. ‘저출산’이란 담론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저출생’이란 정책 패러다임이 나온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란 프레임을 기반으로 인구 정책 질의를 오래 끌고 감.

- 김종천 의원: 질의가 가장 적었음. 예산 사용과 재정 계획에 대해 집중 공략함.

5.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평가

시민 생중계되는 것 고려했을 때, 행정감사 질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각자료가 부족했다. 전체적으로 회의 진행 집중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정책을 질의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어 안타까움. 대전시 자료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바람.

2) 복지환경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09일(월) 10:00 ~ 20:20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 | |
|------|---------|
| 위원회 | 복지환경위원회 |
| 피감기관 | 보건복지국 |

■ 위원장 : 손희역, 위원 : 이종호, 박혜련, 윤용대, 채계순

(2) 복지환경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복지환경위원회_보건복지국 주요 안건

① 대전 의료원 설립에 대한 질의

- 대전 의료원 설치 추진 현황을 물어보며 예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재부에서 예타를 승인한다는 가정하에 예타 결과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고 질의하였음.

→ 의료원 관련 예타가 처음 케이스라 많이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나 예타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현재는 거의 결과가 나온 상태임을 답변하였음.

- 2014년 9월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왜 6년간 회의가 2번만 진행되었으며 자문단이 왜 필요한가 의문이 든다고 질의하였음.

→ 자문위원회 회의는 2번이나 설립추진위원회는 2018년, 2019년을 제외하고 각 년 2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자문위원회와 설립추진위원회가 같은 의미라고 답변을 함.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전 의료원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음.

②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질의

- 대전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내용이 현행에 맞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며 행안부 제도가 2022년에 변경되는데 이에 따라 준비를 하였는지, 사회서비스원 사업내용이 해당 구, 동, 지자체, 마을 위주의 지원 사업이 아니라 직접 사업만 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며 이와 같은 지적이 2018년에도 있었는데 2019년, 2020년 명칭만 변경 후 지속적으로 사업 운영의 변경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음.

→ 시범 사업이다 보니 시행함에 있어 어려움도 많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사회복지현장관련 교육, 사회복지사처우관련 힐링 사업이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음. 조금 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 전환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 해당 구, 동의 지자체 중심 사업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음.

③ 감염병 대응 기반 확충에 대한 질의

- 의료법인 설립 기준이 대전광역시가 타 시,도보다 너무 높아 설립이 어렵다며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시면 보통 1병상 건축비용 4,000만인데 대전 6,000만 100병동 기준 대전 130병동, 정상운영자금 3~6개월 대전은 1년, 성병원 평가등급 1등급이라는 설립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였음.

→ 설립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답변하며 자료상으로 다른 시,도보다는 설립 기준이 높은 거 같으며 추후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음.

④ 대전충남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대한 질의

- 70병상으로 시작하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없냐며 전국에서 처음이면 시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지, 현재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 응급실이 없다는 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재할시 응급 상황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놓았는지 질의하였음. 음압 병동을 2병동 정도 만들면 운영상에 어려움은 있지만 공공형이니 설계시 미리 검토를 해보는게 좋지 않겠냐며 질의하였음.

→ 70병동이 넘어가면 예타에 걸려서 규모가 작은 것이며 시에서 확장을 하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힘이 들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응급실이 없는 대신 가까운 병원과 연계하여 응급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짜고 있으며 음압 병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3) 기타

- 사회복지시설 점검 관련 보조금 횡령 관련 질의
-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실적 질의
-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 점검 질의
- 2층 및 불법 건축물의 경로당 이전 방안
- 장애인 복지 위원회 질의
- 독거노인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실적 질의
-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질의
- 코로나19 의심환자 후송지원 질의
- 전동휠체어 이용자 안전성 강화 질의
- 대전광역시내 노인복지시설 영양사 배치 관련 방안 질의
- 의료관광도시 육성 질의
- 치과기공소 보수 교육 및 면허신고 질의
- 감염병 관련 사각지대 질의
- 청각 장애인 관련 질의
- 장사시설 확충의 장기적 방향 제안 질의
- 시립정신병원 및 노인병원 질의
- 위, 수탁 관련 조례 질의
- 새로시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질의
- 2019년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질의
- 장애인 일자리(시간제 일자리포함) 질의
- 보건의료서비스 현황 질의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이종호 : 직접적인 관계(관련 사업 위원회)에 대한 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였으나 그 외는 원론적인 질의만 하며 추후 조치 요구사항도 당부 형식으로만 넘어감.
- 박혜련 : 준비를 많이 하였으며 의욕도 넘치나 조례와 관련한 부분을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이야기함.
- 윤용대 : 준비가 많이 부족하였으며 제도 및 보조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보였음.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집중을 잘 못함.
- 채계순 : 질의를 하고자 한 사업에 대한 준비가 잘 되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질의를 하였음.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업이 다른 의원보다는 적었음.

(5) 복지환경위원회 전체 평가

자료 준비를 통해 질의를 하는 모습은 있었으나 자료의 내용이 빈약한 부분이 있었으며 질의 시간에 자료 요청만 하다 끝내는 경우도 있었음. 자료의 준비나 사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다른 의원들보다 위원장이 질의를 할 때가 더 좋았다고 느꼈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같은 내용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다른 의원의 질의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다른 의원 질의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는 등 집중을 못하는 태도가 좋지 못하였음.

3) 산업건설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9일(월) 10:00 ~18:30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 | |
|------|---------|
| 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피감기관 | 일자리경제국 |

■ 위원장 : 김찬술, 위원 : 남진근, 박수빈, 오광영, 이광복, 윤종명

(2) 산업건설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산업건설위원회_일자리경제국 주요 안건

① 지역화폐(온통대전)

- 대전시 내 지역화폐가 두 개가 있고, 대덕구와 협의를 통해 하나의 지역화폐로 단일화 필요. 협의체를 구성해 대덕구가 들어 올 수 있게끔 설정해야 함

+ 인천의 시스템을 모델로해서 구상중에 있음. 인천시가 시스템을 맡고, 각 구가 시스템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구상중에 있음

- 지역화폐 온통대전 발행 전부터 지역쏠림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 했음. 실제 유성구 29%, 서구 35%로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쏠림 현상을 구의 역량도 키워줘야 하고 집중적인 홍보, 이벤트가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부분을 다음 예산에도 포함시켜야 함

+ 대전시와 대덕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음. 양 기관의 공식적인 논의 기구를 만들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

② 창조경제혁신센터

- 대전지역에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짐. 현재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전문기관으로 기술창업전담을 활성화하고자 함. 기업들은 지역에게 기부금, 투자금을 받고 있는데 대전은 금액지원이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 신한그룹에서 지역형 공간조성, 스케일업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음.

+ 현금보조보다는 현물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으나 감소하고 있어 고민중에 있음. 최근에 있었던 신한그룹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대전시의 목소리를 기업에게 전달하겠음.

- 권역별로 창업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창업과 성장을 연계하기 위해 대덕밸리, 엔젤투자타운 등 계획에 있는데 이미 조성 완료된 것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하여 현재 연구용역 조사중임.

- 유성구에 대전스타트업파크 조성시에 주변 인력(충남대, KAIST)의 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여 교류하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제안. 그런의미로 인재양성혁신센터를 만들고 이 일대를 5G Free-Zone으로 만드려는 노력에 힘을 써 통신강자인 SK에게 대규모 투자를 받기를 촉구함.

③ 경제통상진흥원

- 모든 사업이 수수료를 떼고, 다음 용역업체 하청업체에 넘겨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음. 꿈터도 수수료를 떼고, 이익을 회사니까 챙기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잘 하겠는지? 커피숍 주인에게도 2018년도 보면 총예산 2억 7천중 카페 지원금은 6600만원임. 나머지는 경통원 유지 5% 제외 데일리잡이라는 회사에 다 준것임. 그것의 운영비가 직원을 채용해서 상담을 하는 것인데, 경통원은 적자를 낼 이유가 없는데도 발생. 사업을 많이 주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로 보임. 올해 경통원에 대한 철저히 감사 해야함

+ 점검하겠다고 답변함

(3) 기타

- 반려동물 사체처리 질의
- 마권장외발매소 건물 활용 질의
- 컨택센터 질의
- 저온창고시설 배분 촉구 질의
- 자영업자유급병가제 질의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윤종명 : 행정사무감사는 사업의 진행을 확인 하는 자리가 아니다. 확인을 하고 사업의 과정, 결과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이끌어내야 하는 자리다. 사무감사자리에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과정을 묻는 것은 준비를 안 해왔다는 것이다. 그래도 다양한 분야의 질의는 했고, 현장의 의견을 담으려는 노력은 있었다.

- 남진근 : 원론적인 질의만 했다. 현황 파악이 없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추상적인 사업들만 제시하였음.(시장 활성화 전에 시장 인구 수요조사와 코로나 19 연관성이 필요한데, 추상적으로 이야기 하였다)

- 오광영 : 자료조사를 해온 것으로 다양한 질의를 하였다. 하지만 본인이 행정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은 부족하다. 행정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 박수빈 : 준비를 전혀 안 해왔다. 마사회, 일자리 꿈터 등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들만 다시 짚고 넘어가는 수준 이었다. 본인이 준비를 해서 문제를 해

결하는 대책을 마련하거나 행정에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해야 한다.

- 이광복 : 무난했던 질의였다. 다만 질의의 끝맺음이 부족했음. 서구갑지역에 창업관련 센터가 없는 것에 대한 질의는 대표성이 떨어지는 질의였다.

(5)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평가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 전체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이다. 사업의 내용을 확인 하는 자리가 아니고 변화를 이끌고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자리이다. 그래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조사를 충실히 해오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면이었다. 김찬술 위원장의 경우 질의 내용은 훌륭했지만, 위원회의 질의 평균 내용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4) 교육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9일(월) 10:31 ~ 16:51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 | |
|------|----------|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 피감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 위원장 : 구본환, 위원 : 김인식, 우애자, 정기현, 조성철

(2) 교육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교육위원회_주요 안건

①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1) 취업률

-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음. 매년 장학금 및 다양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과 달리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음. 5년 마다 운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평가 지표에서 취업률 간 급간 차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운영 평가 지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

+ 대전이 다른 시도에 비해 취업자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성화고 취업률이 낮아지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임. 특성화고 실습이 현장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업들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시간이 짧아져 채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음.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선도 기업 등에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성화고 평가 지표는 교육감이 정함. 급간은 권고안 범위를 따르고 있음. 대전시교육청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음. 학과 개편 등을 통해 취업률을 고민하고 있음. 학생들의 인원 연계된 부분이라 해당 학교와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음.

2) 학과 개편

- 특성화고 취업률 상승 및 학생 선호 학과 개편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 (3년간 11개교 22개학과 신설 개편함) 투입된 총 예산이 3년 간 약 29 억임. 철저한 수요 조사, 타시도와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함. 대전충청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 혜택을 우리 학생들이 누리도록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학과 개편이 학생들 취업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른 수요와 신입생 수요(신입생 충원 안 되면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개편해야 하며, 산업방향과 맥을 같이해 학과 개편을 해야 한다고 답변함. 또한 혁신 도시 선정에 따른 노력으로는 지역에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는 지 파악이 필요하고 유관기관과 선도기업 등의 산업체 상황을 파악하여 같은 방향으로 학과 개편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함.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우리에게서 희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함.

- 학과 개편을 한 12개 학과는 졸업생이 배출됨. 개편 후 교육과정이 취업과 연계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추적 관리가 필요함.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예산 투입 후 관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함.

+ 학과 개편 후 충원률이 높아졌지만 취업률까지는 높아지지는 않았음.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답변함.

3) 현장실습 현장에서 성폭력과 폭행 사건 발생

- 특성화고 실습 현장에서 2019~2020 걸쳐 성폭행과 폭행 사건 발생함. 관련 학생과 현장에 대한 조치 사항 질의함.

+ 학교에서는 바로 학생들을 복귀 시킴.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 중임. 학생 노동인권 교육 및 성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교사들의 현장실습 현장 방문을 월 1회로 강화했음. 졸업 후에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강화하려고 한다고 답변함.

-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추수 지도가 어렵다는 것 알고 있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성추행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현장 실습 학생 대상 전수 조사 실시하였는지 질의함?
- +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현장 실습 대상 전체에게는 실시하지 않음. 예민한 부분이 있어 해당 학교 외의 전수조사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교사들의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함.
-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아픔도 있다는 이야기를 학교현장에 들었음. 설문지를 돌린다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임. 전수조사 고민해 달라고 요구함.
- + 복귀 후 상담을 통해 밀도 있게 할 수 있음. 상담이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② 학교 회계 집행 관련

- 교육청은 예산 조기 집행을 요구하며 불용액 최소화 요구 3회나 실시하여 학교 현장이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함. 교육청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교육부에서 주는 인센티브 10억을 받기 위함인지 질문함.

+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불용액을 줄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함. 또한 불용액이 전년 대비 높은 것은 맞는데 수익자 부담 경비를 감액 처리를 하지 않아 불용율이 높은 것도 있다고 답변함. 또한 감사원의 권고로 교육부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라고 하며 대전도 2019년 11월에 개정하여 올해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함.

- 조기 집행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꾸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제대로된 예산 집행이 아님을 지적함. 특히 불용액을 사용하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음에도 교육청이 냉난비를 20억 추가로 내려보낸 점을 지적함

+ 중대본에서 문을 열고 냉난비를 가동하라고 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도 고려하고, 학교차원에서 요구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비가 남은 것은 사실이지만 99% 사용가능하다는 의견들도 있다고 답변함.

- 교육부에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내년에는 세수

확보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예산에 있어서는 교육부에서 책임지지 않음. 지방 교육 자치는 예산 재정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임.)

+ 집행결과 분석 후 감액하겠다고 답변함

- 그런 조사들이 학교들로 하여금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됨을 지적함

③ 공공기관 청렴도

- 2019년 행정감사 및 국감에서도 다루어졌음. 최하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매년 조직 전체의 인식 변화 등의 답변이 계속 되어왔으나 바뀌지 않았음을 지적함.

+ 청렴도의 측정 대상이 매년 바뀜. 답변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달라 매년 지표별 점수 변동이 있음을 답변하며 권익위 청렴도 평가는 인식과 경험만으로 평가하지만 시책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이야기함.

- 청렴 성공 프로젝트, 반부패 역량 보고서를 받아보니 학교장과 기관장, 국과장 및 행정실장이 문제라고 나옴. 고위직 교육이 중요한데 주로 교사나 하위직 공무원에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구성원들에게 인사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짐. 이것을 못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함. 현장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고위 공직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함. 사전 차단이 중요함.

+ 공위공직자 교육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고위공직자 처벌 수위 매우 높아졌음. tf팀 운영하면서 교감 임용 승진 제한 조항 인사 규정에 반영 등 방어 장치를 만들어 실천하고 있음. 또한 교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답변함.

- 2020년 평가 결과가 12월 9일에 나오니 평가 결과 의원실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함

④ 급식실 안전사고 현황

- 급식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2018~2020) 원인이 무엇이고, 실질적인 예방 대책(포스터 등은 제외)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함.

+ 무거운 물건 이동 시 2명이 옮기는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음. 안전사고 관련 교육을 관리자 연수, 담당자 연수 진행하고 있음. 매주 급식실 조리종사원 팀끼리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급식실 노후화된 부분 현대화 필요. 급식실 현대화 작업 진행중이라고 답변함.

- 학교에서도 산업 현장 못지 않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필요함을 요

구함.

+ 산업 재해 유형과 근로자 안전 의식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작업 전 5분 내외의 안전 주지 교육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

⑤ 교육청 간부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조 “교육청, 복수노조 개입 의혹 해명하라’ /굿모닝 충청> 기사에 보면 노조담당 사무관 장모 건물을 제2노조가 사무실로 임대했고 교육청은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질의함.

+ 제2노조가 담당 사무관과 의논 없이 장모님이 운영하는 건물에 임대하여 입주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음. 또한 제1노조에서 확인 요청한 사무실 임대 부분을 알아 봤는데 이상이 없었다고 답변함.

- 현재 제2노조가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동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함.

+ 장모님과도 알고 사무관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친분이 있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답변함

- 담당 사무관이 노조사무실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 내 빈 사무실이 있는지 알아보는 공문을 2번이나 내려보내 편의 제공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답변을 요구함

+ 공문 보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편의 제공 의혹은 없다고 답변함.

- 노조 사무실 알아보고 교육청 내 빈 공간 알아보는 일을 2번이나 하는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의혹을 키움.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이 빈 사무실이 있는지 알아보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 발견되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함.

+ 사실 확인 시 이런 내용은 없었음. 그런 내용을 듣지 못함. 제1노조에서 국민권익위에 민원으로 제출함. 조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될 듯함.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노동조합 활동 보장해 줘야함. 복수노조 법으로 보장함.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개입하는 것은 불신 조장 등 조직을 위해 함. 책임을 물어야 함. 의혹 제기가 되었음에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책임이 교육청에 있음을 지적함.

⑥ 학교급식비 관련

- 학교 급식비 중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보조금이 사립 유치원에 농산물 꾸러미로 배송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월1회 주문, 주1회 배송

으로 인해 식재료의 신선함을 보장할 수 없음, 현금 지급 시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입비가 증가하지만 현물로 줄 경우 그렇지 못하며 예산 취지에서도 벗어남, 독점으로 가격이 비쌌음, 인건비 형식으로 2020년에는 44억 중 11억을 배송수수료로 선 공제함).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 현물 공급에 대해 99% 불만족한다고 나옴. 시에 현금지급 요청 공문을 보내라.

+ 2019년 유치원 조사에서는 현물 지급을 더 선호하였으나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치원들의 의견을 받아보겠음. 안전한 식자재가 들어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함. 현물과 현금 관련해 우려스러운 점을 시에 의견 표현하겠다고 답변함.

⑦ 사립학교 관련

1)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 2016년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대안이 마련되었는지 질의함
+ 대전의 사학들은 70년대 이전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에 학교가 부족해 설립 기준이 낮았고 조건부 설립도 가능해 수익용 기본재산보유액이 매우 낮았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행한다고 봄. 컨설팅 및 용역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특별한 방안이 없었고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연구를 했으나 결국 사립학교법이 변경되어야 가능한 사항이라고 결론이 났다고 답변함.

2) 높은 기간제 교사 채용 비율

- 정교사와 임금 복지 예산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월 내 기간제가 605명인 상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임)
+ 특성화고와 사립학교의 경우 선택교과에 따른 일시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음. 사립의 경우 공립과 달리 이동에 제한이 있어 일시적인 선택교과 운영을 위해 기간제 교사를 선호하기는 함. 기간제교사 비율 35%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2021년에는 23%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함. 기간제 비율에 따라 사립재단 경영 평가에 반영하려고 그 결과로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고 답변함.

⑧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긴급조치 현황

-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현황에 보면 출석정지만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라고 보이는데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하다. 학교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 관리가 가능한가?

+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결과로 특별교육도 가해-피해자 분리가 가능함. 2,3호의 경우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차를 달리하거나 가해 학생의 경우 상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지도하여 가해-피해 학생 분리가 잘 이루어짐. 서면 사과만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조치도 같이 취해짐. 또한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함.

⑨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 관련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이 교육부 30% 각시도가 7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정부와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 규모와 BTL 사업 비중은 질의함.

+ 전액 교육청 부담인데 교육 재정은 국고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대답함. 또한 교육부 계획이고 아직 시 계획은 없으며 대전형은 공간혁신 사업에 옵션으로 추가하는 수준임. 별도 사업이 아님. 건물 입구에 시설 설치 등의 수준임. 교육부 계획을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답함.

- 교육감은 언론에 2025년까지 45억원으로 발표했는데 계산 없이 발표한 것인지를 지적함. 사업비가 많아지면 BTL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음. 지금도 학교 강당 공사가 BTL로 진행해서 이자를 내고 있음. BTL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함. 다른 분야도 이 문제가 심각함. 행자위에서 문제가 되었음. 한번 발생하면 수습하기 어려움. 충분한 검토 필요함. 계획 수립 시 회의 동의를 얻으라고 함.

(3) 기타

-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구본환 의원이 모친상으로 불참하여, 부위원장인 우애자 의원이 진행함
- 행정 사무 감사 남은 일정을 이틀 썩 뒤로 미루어 진행하기로 함.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구본환 : 모친상으로 불참
- 김인식 : 현장 실습 중 발생한 성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현장 실습을 나가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시의 적절한 질의를 진행함. 또한 특성화고의 취업률 및 학과 개편 문제를 지역의 혁신 도시 지정과 연관지어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함.

- 우애자 : 특별한 자료 수집이나 현장 조사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사항 중심으로만 질의가 진행됨.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를 통해 2차 가해를 방지해야한다는 질의를 하였는데 학교폭력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나 결과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정기현 : '최근 언론에서 나온 이슈 제시-교육청 자료 분석-질의' 형태로 짜임새 있는 질의가 이루어짐. 코로나로 인해 학교 예산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줄이라는 교육청의 압박으로 예산이 남용되는 사례를 지적하고, 학교 급식비 중 환경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보조금이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을 요구하였으며, 교육청노조에서 일어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함.
- 조성철 : 그동안의 행정사무 감사나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온 사항 중심(청렴도, 사학 문제 등)으로 질의를 진행하여 교육청의 노력이 더 필요함을 강조함.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교육청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 의원이 일방적으로 다그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함, BTL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들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계획 수립 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청의 사업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보임.

(5) 교육위원회 전체 평가

교육청의 보도자료 및 교육 관련 이슈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질의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제공되는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준비하는 모습이 부족하거나 본인의 질의에만 신경을 쓰느라 피감기관의 답변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